

2021
5. 3

KRIHS POLICY BRIEF
No. 814

발행처 국토연구원
발행인 강현수
www.krihs.re.kr



국토정책 Brief

KRIHS POLICY BRIEF

접경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지역 간 연계사업 추진방안



주요내용

- 1 장기적으로 남북협력을 추진하고 접경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한 경기·인천·강원의 지역 간 연계사업은 ① 접경지역 균형발전, ② 중앙부처 남북협력사업의 연계성, ③ 정책 기조의 부합성, ④ 관련 사업의 제도적 연계성을 기준으로 선정
- 2 접경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한 총 19개의 연계사업(인천 5개, 강원 14개)을 선정
 - (인천) 서해남북평화도로, 교동 평화산업단지, 경기만·서해5도 국제관광특구 등
 - (강원) DMZ 평화누리길, 철원 평화산업단지, 동해관광공동특구 등
- 3 관광, 산업·경제, 교통 인프라 등의 분야별 연계사업 추진전략은 다음과 같음
 - (관광) 지자체별로 보유한 테마별 관광자원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관광 콘텐츠를 발굴하고 이를 브랜드화
 - (산업·경제) 대북제재 아래 지자체 간 분업이 가능한 통일특구 및 산업단지 등의 지자체별 사업을 선정하고 역할을 분담하여 추진
 - (교통 인프라) 남북협력 추진 동력 마련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접경지역 거점 개발 및 교통 인프라 연계를 통한 접경지역의 지역경쟁력 강화

정책방안

- 1 (단계별 추진방안) 연계사업은 남한부터 선(先)개발하는 초기단계, 남북공동사업을 추진하는 확대단계, 남북 전역으로 확산하는 심화단계로 나누어 단계적으로 추진
- 2 (거버넌스 구축방안) 중앙부처·지자체·지역주민 등 다양한 주체의 참여를 통한 국내 거버넌스 구축 및 남북협력, UN·UNESCO 등의 국제기구를 통한 국제협력 추진
- 3 (법·제도 개선방안) 국회에 계류 중인 '평화(통일)경제특구법' 등의 남북경협 관련 법안 제정 및 접경지역 균형발전 관련 지역별 맞춤형 법·제도 개선
- 4 (소요자원 조달방안) 접경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남북교류협력을 위한 지역개발 사업 추진 시 국비 부담비율 상황과 민간자원의 활용방안을 종합적으로 고려
- 5 (모니터링체계 구축방안) 중앙부처·지자체 간 협력을 통해 연계사업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평가할 수 있는 접경지역 균형발전 모니터링체계 구축

강민조 부연구위원
임용호 부연구위원

1

남북 접경지역 실천사업 연계의 필요성 및 추진방향

(필요성) 남북관계가 개선되기 이전인 현 단계에서 남한 접경지역 내에서 접경지역 간 상생 발전방안을 마련함으로써 낙후성을 극복하고 지역의 경쟁력을 확보하여 남북관계가 개선될 시기에 남북 접경지역 간 협력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

- 남한 접경지역 간 실천사업의 연계는 ① 지자체별로 추진되고 있는 실천사업의 '연결'을 통해서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함으로써 또는 ② 지역적 차별성을 부각시킬 수 있는 실천사업 간 '관계'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접경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
- 남북 접경지역의 실천사업 '연계'란 접경지역의 역할과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남북협력을 통한 상생, 통합 법·제도 마련, 평화조성이 가능한 사업들을 남북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것을 의미

(추진방향) 접경지역 간 연계협력을 촉진함으로써 지역의 특화된 자원을 공동 활용하고 구체적이며 실질적인 사업추진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상생 발전의 기회 마련

- 접경지역 지자체 간 연계협력 모형(박양호 2005)*을 적용하여 5대 분야별 연계사업의 추진방향 제시

* ① 협동공유형, ② 파트너십형, ③ 연결의 경제성, ④ 통합형 분업이론

표 1 접경지역 간 연계협력의 분야별 추진방향

기본방향	
	• 경기 접경지역 실천사업과 남북 및 인천·강원 접경지역 연계사업 선정 • 선정사업을 기반으로 지역별 전문화·특성화를 통한 경쟁력 확보 • 지역별 특성을 기반으로 지자체 간 상호보완성 강화 및 시너지 확대
5대 분야	추진방향
DMZ 생태·문화·평화 관광 분야	• 실천사업과 연계 가능한 남북 및 인천·경기 접경지역 관광사업 선정 • 지자체별 특수성을 고려한 관광 콘텐츠 발굴 및 브랜드화 • 관광자원의 기능적 연계를 통한 시너지 확산 및 연관산업과의 협력 강화
산업·경제 분야 (통일특구 및 산업·물류 단지 등)	• 대북제재 아래 지자체 간 분업이 가능한 사업선정 및 역할 분담 • 지역별 특성과 산업육성을 통한 광역 클러스터(평화경제 메가리전*) 조성 * 메가리전(mega-region): 교통·물류 등 사회 기반시설을 공유하고 경제·산업적 연계가 긴밀한 인구 천만 명 이상의 도시 연결 권역 • 지자체 거버넌스 확대 및 공동사업 참여 활성화
도로·철도 등의 교통 인프라 분야	• 지자체 간 시너지 확산이 가능한 사업 간 공간적·기능적 연결 • 광역 교통 인프라와 지역 교통 인프라의 통합적 스마트 교통망 구축 • ABCD* 기술 기반의 교통 데이터 공동 구축 및 활용 체계 마련 * ABCD: 인공지능(Artificial Intelligence), 블록체인(Blockchain), 클라우드(Cloud), 데이터(Data) 관련 기술
인적교류 분야 (교육·문화·의료·보건 등)	• 지자체별 교육기관과 연계한 특성화 교육 추진 및 현장학습 • 초국경 의료·보건·방역 협력을 위한 전문가 교류 및 공동 연구 • 지자체 간 통합적 분업을 통한 시너지 효과 제고
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및 군부대 이전 유희부지 활용 분야	• 지자체 간 협력을 통한 제도적 지원방안(국가주도개발, 토지매입비 지원 등) 마련 • 유희부지 활용을 위한 국방부·지자체 협력체계 마련 • 지역별 전력물품 특화산업 육성을 통해 재정자립도 및 지역주민의 삶 향상

출처: 강민조 외 2020, 34.

2

접경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한 인천·강원 연계사업 선정

(선정기준) 경기·인천·강원 접경지역 간 연계사업 선정기준은 ① 접경지역 균형발전, ② 중앙부처 남북협력 사업의 연계성, ③ 정책 기조의 부합성, ④ 관련 사업의 제도적 연계성을 들 수 있음

(선정절차) 문헌조사, 접경지역 지자체 실무자 면담조사와 전화조사, 접경지역 관련 중앙부처 실무자와 전문가 조사 등을 통해 접경지역 간 연계사업을 선정

접경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한 경기·인천·강원 연계사업 선정

인천·강원 접경지역의 39개의 후보사업을 대상으로 ① 경기북부 및 중앙부처의 남북협력사업과 연계가 가능하고, ② 연계사업의 선정기준에 부합, ③ 인천·강원 접경지역 실무자 전화조사와 ④ 통일부,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등의 전문가 자문회의 및 경기북부 접경지역의 실무자 면담조사를 통해 인천 5개, 강원 14개 연계사업을 선정

- (인천 접경지역의 연계사업) 문헌조사와 실무자 면담·전화조사,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해 경기북부의 실천사업과 연계가 가능한 군부대 이전에 따른 유희부지 활용 분야 이외의 4개 분야에서 5개 사업을 선정
- (강원 접경지역의 연계사업) 경기북부 접경지역의 실천사업과 향후 남북협력 확대 및 남북협력 심화단계에서 국가주도의 중앙부처사업과 연계가 가능한 강원 접경지역의 5개 분야의 14개 사업을 선정

표 2 경기북부 접경지역의 실천사업과 인천·강원 접경지역의 연계 가능사업

남북협력 분야		경기북부 접경지역 실천사업	인천 접경지역 연계 가능사업	강원 접경지역 연계 가능사업
생태·문화·평화 관광	통일 특구	• (연천) 국립 제3현충원 건립 • (연천·포천) 임진강-한탄강 주상절리길 생태·문화·평화 관광루트 조성 • (김포) 포구 및 나루벚길 복원사업	• (강화) 교동 문화관광지구 • (인천) 경기만·서해5도 국제관광특구	• (10개 접경지역) DMZ 평화누리길 • (양구) 해안 편지불 지방정원 조성 • (철원) 임진강-한탄강 주상절리길 • (인제) 설악-금강 국제평화공원 • (고성) 동해관광공동특구
	산업·경제	• (파주) 통일특구 • (고양) 통일특구 JDS지구와 연계한 남북 영상문화단지	• (강화) 교동 평화산업단지 • (인천) 서해남북평화도로 [영종·신도·강화·개성·해주]	• (철원) 평화산업단지
교통 인프라		• (연천·동두천·양주) 경원선 복원 및 고속철도 유치	• (웅진) 우뚝가사리 조성사업	• (철원) 경원선 복원 및 금강산선 복원 • (강원) 동서평화고속도로 • (고성) 동해북부선
인적교류		• (양주) 운릉 개방을 통한 남북 문화재 교류 • (포천) 남북경협 전문가 양성 • (포천) 남북교류 스포츠협력센터 • (김포) 한강하구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남북공동 상세조사 추진 • (연구진 발굴사업) 초국경 질병 등에 대한 보건·의료 협력	-	• (고성) 평화통일대학원 유치 • (강원) 청소년 동계올림픽 개최 • (인제) 산림협력 • (양구) 남북공동방역연구소
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및 군부대 이전에 따른 유희부지 활용		• (동두천시) 경기의료원, 경기문화재단, 육군사관학교 등 유치	-	• 전력지원체계산업 클러스터 [동두천-연천-철원-화천-양구]

주: 5개 분야별로 도출한 연계 가능사업 목록 중에서 인천·강원 사업은 광역지자체 차원에서의 중점사업, 시군별 사업은 각 기초지자체 차원에서의 중점사업을 의미함.

출처: 강민조 외 2019, 50(경기북부 사례); 강민조 외 2020, 83 표 내용을 바탕으로 저자 재구성.

3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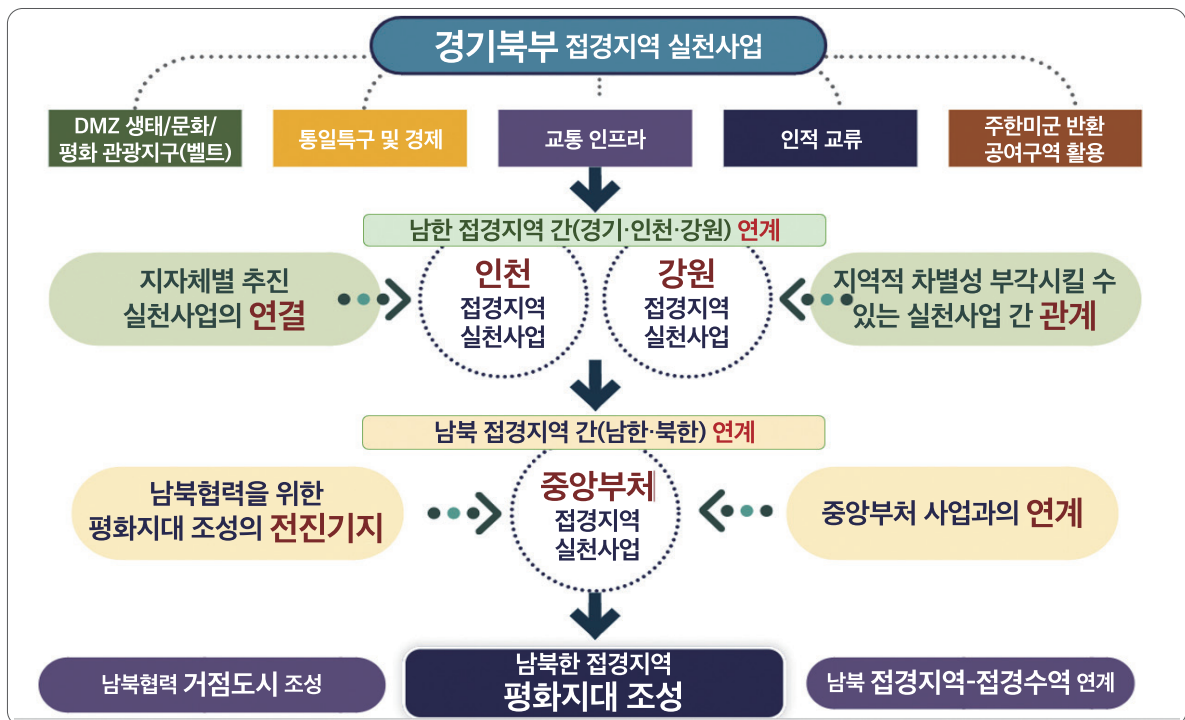
분야별 접경지역 연계사업의 추진방안

남북 접경지역사업의 연계는 실천사업으로 도출한 5개 분야*별로 추진방향을 제시함

* 5개 분야는 2차 연도 연구(2019년)에서 전문가 조사를 통해 도출한 남북 접경지역 협력의 우선순위 분야별로 ① 생태·역사·평화 관광 분야, ② 통일경제특구 및 경제(산업·물류)지구/벨트 분야, ③ 도로·철도 등의 교통 인프라 분야, ④ 남북 교육·문화·의료·보건 협력 등의 인적교류 분야, ⑤ 군부대 이전 유휴부지 활용 분야별로 제시

- 경기·인천·강원의 남한 접경지역 간 연계, 경기북부와 인접한 남북 접경지역 및 중앙부처 실천사업 연계, 남북 접경지역 전체를 아우르는 초광역형 연계(육상형-남북협력 거점도시 조성 및 접경지역, 해양형-접경수역)로 구분

그림 1 접경지역의 연계사업 추진방향



주: 남한 접경지역 간(경기·인천·강원 접경지역 연계사업) 및 남북 접경지역 간(중앙부처의 남북협력사업) 연계방향.
출처: 강민조 2020, 91.

분야별 남북 접경지역 연계사업 추진방안

(DMZ 생태·문화·평화 관광 분야) 경기·인천·강원 접경지역 지자체별로 보유한 테마별 관광자원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관광 콘텐츠를 발굴하고 이를 브랜드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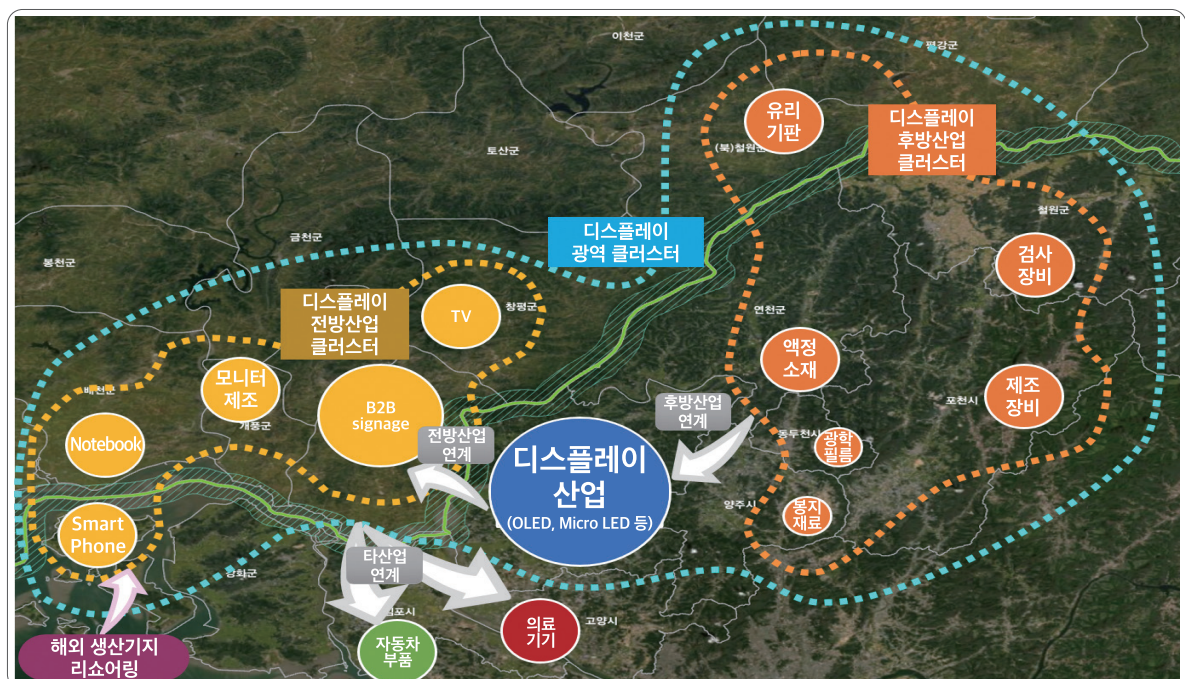
- 경기·인천·강원 지자체 간 관광자원의 기능적·심미적 심층 연계를 통해 시너지 확산 및 연관산업(제조업·농수산업 등)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남한의 한반도 신경제 구상과 북한의 경제개발계획에 따라 공통으로 수요가 있는 사업 추진
 - 남한은 DMZ 국제평화지대화 및 동해관광공동특구 조성 등에 중점
 - 북한은 농업·공업·관광경제개발구·경제특구와 금강산-원산 관광특구 조성에 중점
- 남북 접경지역은 자연환경뿐만 아니라 역사·문화 측면에서도 유사성이 높으며 이를 기반으로 지역적 특성을 결합한 지역 연계관광의 추진 필요
 - 판문점·개성 평화협력지구 조성을 통해 생태·문화·평화거점 및 관광벨트 구축

그림 2 접경지역 간 관광 분야 연계를 위한 주요 관광사업과 유형별 관광자원 현황

주: 2018~2020년 4~6월 SPOT 위성영상을 활용하여 토지피복 분류; 관광 분야 사업 저자 지오코딩.
 출처: 강민조 외 2020, 93.

(통일특구 등의 산업·경제 분야) 대북제재 아래 지자체 간 분업이 가능한 통일특구 및 산업단지 등의 지자체별 사업을 선정하고 역할을 분담하여 추진

- 지역별 특성화 산업육성을 통한 광역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지자체 간 거버넌스 확대 및 공동사업을 활성화
 - (예시) 남북 접경지역의 중심산업(디스플레이)과 전·후방산업과의 연계를 통한 초광역 산업 클러스터 조성 (<그림 3> 참조)
- 평화(통일)경제특구법(안)의 법적 기반 마련 후 통일특구 추진에 따른 종합발전 구상을 수립하고 통일특구 실천사업 연계 추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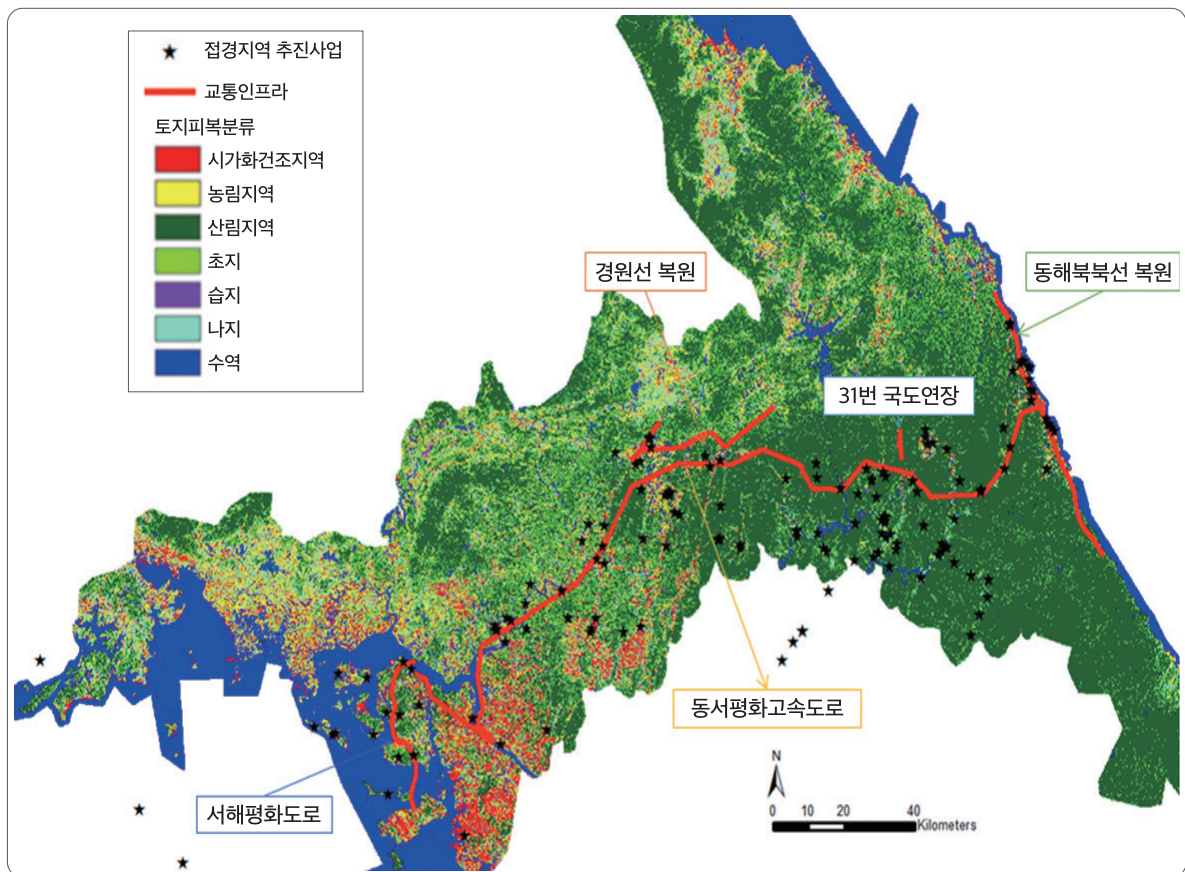
그림 3 남북 및 지자체 간 산업 전문화와 상호연계를 통한 광역 클러스터 조성 예시

주: 산업입지는 디스플레이 산업의 전후방 산업에 대한 예시일 뿐이며 남북 및 지자체가 지역자원, 교통, 법제도를 총체적으로 고려하여 입지를 선정해야 함.
 출처: 강민조 외 2020, 114.

(도로·철도 등의 교통 인프라 분야) 남북협력 추진 동력 마련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접경지역 거점 개발 및 교통 인프라 연계를 통한 접경지역의 지역경쟁력 강화

- 남한 접경지역 간 연계사업으로서 서해남북평화도로(영종도-신도-강화-개성-해주), 동서평화고속도로(영종도-고성), 경원선 및 금강산선, 동해북부선 복원 등을 추진
- 도로·철도 등의 교통 인프라를 통해서 지자체 간 시너지 확산이 가능한 사업들을 공간적·기능적으로 연결하고 광역 교통 인프라와 지역 교통 인프라의 통합적 스마트 교통망을 구축
 - ABCD 기술* 기반의 지자체 간 교통 데이터 공동 구축 및 활용체계 마련
- * ABCD 기술이란 인공지능(Artificial Intelligence), 블록체인(Blockchain), 클라우드(Cloud), 데이터(Data) 관련 기술
- 교통 인프라 협력 시 통행 데이터 구축 및 공동 활용방안 마련을 통해 통행수요에 따른 적절한 신규 교통인프라 공급 및 개선이 가능하도록 계획

그림 4 접경지역 주요 추진사업과 연계 가능한 주요 남북연결 교통 인프라사업



주: 2018~2020년 4~6월 SPOT 위성영상을 활용하여 토지피복 분류; 교통 인프라 사업 및 추진사업 저자 지오코딩.
출처: 강민조 외 2020, 116.

(남북 교육·문화·의료·보건 협력 등의 인적교류 분야) 지자체별로 교육기관과 연계한 특성화 교육 추진 및 현장학습을 통해 인적교류를 추진하고 초국경 협력이 필요한 의료·보건·방역 협력 및 산림·수자원 등의 환경협력을 추진

- 특히, 남북의 관련 전문가 교류 및 공동 연구를 수행하고 지자체 간 통합적 분업을 추진

(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및 군부대 이전 유휴부지 활용 분야) 지자체 간 협력을 통한 제도적 지원방안(국가주도개발, 토지매입비 지원 등)을 마련하고 유휴부지 활용을 위한 국방부·지자체 협력체계를 구축

- 접경지역 지자체별 전력 물품 특화산업 육성을 통해 재정자립도·지역주민 삶 향상

4

연계사업의 단계별 추진방안 및 거버넌스 구축방안

연계사업의 단계별 추진방안

남북관계 개선에 따라 ① 남한 접경지역 우선 개발(초기) → ② 남북 접경지역 간 남북협력(확대) → ③ 남북 전역으로 남북협력 시너지 확산(심화) 단계별로 추진

표 3 남북 접경지역 간 연계협력을 통한 분야별·단계별 추진방안

추진 분야(과제)	남북협력 초기단계	남북협력 확대단계	남북협력 심화단계
공통 분야	남한의 '접경지역협력위원회(가칭)' 구성(대통령 직속)	'남북접경위원회(가칭)' 구성(남북 정부, 국제기구, 제3국 등)	남북 제조·유통·금융·서비스 분야 등의 표준 제정 및 자유화
DMZ 생태·문화·평화 관광 분야	- DMZ 관광 인프라 개발 - 포구 및 나루뱃길 조성 - 한강하구 남북 공동조사 추진 - 한탄강 주상절리길 남북 공동 DMZ 세계유산 등재 추진 - 생태·역사·문화 전문가 교류	- 남북연결 탐방로 등 교통 인프라 구축 및 북측 관광 인프라 개발 - 남북측 포구 연계형 나루뱃길 - 남북공동의 한강하구 골재채취 - 연천-포천-철원 주상절리길개발 '남북교통협정(가칭)' 체결	- 서해-한강하구-내륙을 연계하는 초광역 관광 프로그램 개발 - 남북 자유관광 - 서부(평양-신의주), 동부(백두대간)를 남북 관광 프로그램 다양화 - 동북아 국제 관광 연계
산업·경제 분야	- 통일경제특구 관련 법 제정 - 중심산업 및 후방산업 - 세금감면(국고 보조), 제품 우선구매 등 법·제도적 지원방안 마련 - 남북 공동 대북제재 안에서 협력가능 사업 분야 도출	- 개성공단 정상화, 통일특구 연계 - 지속가능성 확보 및 전방산업 입지 (해외 생산기지 리쇼어링) - 광역클러스터 조성 - 국제기구 또는 제3국 참여방안 모색 및 인센티브 마련	- 타 산업과의 연계를 통한 접경지역 산업 활성화 - 남북 내륙 산업단지 시너지 확대 - 환황해권, 환동해권 연계 국제산업 거점 조성 - 동북아 자유무역협정 체결
남북연결 도로·철도 등의 교통 인프라 분야	- 동서 광역교통망과 지역교통망 확충 - 스마트 교통체계 구축 - 접경지역 교통 빅데이터 구축 및 K-클라우드 사업(춘천)과 연계 - 남북교통망 연계를 위한 표준화 및 전문가 교류	- 남북한 광역교통 인프라 확충 - 남북 대심도 교통망 구상 - 항공 교통 협력 - 남북 교통데이터 공동활용 - 북한 교통인프라 개발을 위한 ODA 등의 국제협력 추진	- 중국(일대일로)-러시아(유럽연결)로의 대륙연결 교통망 구축 - 국제 해운·항공물류 허브(hub) 조성을 위한 국제협력 강화 - 북한 동서 광역교통망 확충
남북 교육·문화·의료·보건 협력 등의 인적교류 분야	- 지역 대학 및 전문기관과 연계한 남북협력 인력양성 거점 조성 - 남북협력 거점 조성 - 타 지역과의 교차지원을 통한 상호 호혜 및 시너지 확산 - 남북 의료·방역 관련 전문가 교류	- 남북 공동방역 추진 - 남북 수산/바이오 협력사업 - 남북 의료/보건 협력 관련 법·제도 및 의료시설 마련 - 해양·환경 국제기구 남북 공동가입 및 국제회의 개최	- 사회 전 분야 남북 인적교류 확대 - 남북 거점교류, 학점교류제 운영 - 남북 공동으로 보건·의료·방역협력 확산(공동연구소 설치 등) - 남북 산림·축산 유전자은행 설립 - 남북공동 재난·재해 대응체계 마련
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및 군부대 이전 유류부지 활용 분야	- 민·군·관 거버넌스체계 마련 - 유휴지 관련 법·제도 개선 - 남한 접경지역 전체를 아우르는 활용계획 및 접근 전략 수립 - 국가균형발전, 한국형 뉴딜과 연계한 유휴지 재생사업 추진 - 유휴부지 활용을 위한 군부대 주변 지뢰 및 장애물 제거	- 유휴지 확대 및 활용에 대한 남북공동 지역관리계획 수립 - 북한 유휴지 활용을 위한 남북협력 - 민통선 조정 등을 통한 유휴지 활용 활성화 - 유휴부지의 남북협력도시 조성을 통한 도시협력 테스트베드 조성 - 지뢰 및 장애물 제거 확대	- 대규모 군사시설 해체 및 이동에 대비한 유휴지관리체계 마련 - 남북공동 근거지 환경오염 실태 파악 및 오염 정화 실시 - 시설보존 및 박물관 등 건립 - DMZ 투어 등을 위한 방문객 쉼터, 야영장 및 대피소 조성 - 지뢰 및 장애물 제거 확대

주: 남북협력 초기 이전단계에서는 ① 범부처 남북 접경지역 관련 연구성과 공동활용체계 마련, ② 남북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국토자원 남북 공동조사 (한강하구 포함), ③ DMZ 접경지역의 브랜딩 추진 등(2차 연도 연구인 강민조 외 2019 참조).

출처: 강민조 외 2020, 143-144.

거버넌스 구축방안

(국내적 차원의 거버넌스 구축방안) 접경지역의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 및 연계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국내 차원에서의 접경지역 관련 중앙부처, 해당 도·시·군 지자체 간의 거버넌스 구축

- (중앙부처·지자체) '접경지역협의체(가칭)'의 의사결정기구와 실무단 구성을 통한 접경지역 관련 중앙부처·지자체 거버넌스 추진체계 구축
- (광역·기초지자체) 접경지역 간 연계사업과 남북접경협력사업을 위해서는 광역지자체(대규모 사업선정, 중앙정부와 교섭·협상 등)와 기초지자체 간에도 역할 분담

(남북협력 차원의 거버넌스 구축방안)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응 및 대북제재 속에서 가능한 의료·보건·방역 협력과 수자원·산림 등의 인간안보와 관련된 남북협력을 우선적으로 추진

- 남북대화의 상설기구로서 '남북접경위원회(가칭)' 설치함으로써 초국경 질병인 코로나19, 메르스, 아프리카돼지열병(ASF), 말라리아 공동방역 등은 인도적 지원과 남북 접경협력을 통한 남북 간 신뢰 구축이 필요
- (상호호혜적 협력) 남북 간 공유하천 공동관리, DMZ를 포함한 자연환경 보존 등 남북 간 서로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 노력과 북한의 호응과 동참을 촉구할 수 있는 협력사업 마련

(국제협력 차원의 거버넌스 구축방안) 대북제재 상황 속에서도 남북공동의 DMZ 세계유산 등재 등을 위한 UN, UNESCO, IUCN(국제자연보전연맹) 등 국제기구 및 국제기관과의 협력 추진이 가능

정책제안

남북 접경지역의 연계사업 추진을 위하여 국내 남북, 국제관계 차원에서의 거버넌스 구축, 법·제도 개선, 실효성 있는 소요자원 조달방안 마련, 접경지역 균형발전 모니터링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

표 4 접경지역 간 연계사업 추진을 위한 주요 정책제안

정책제안	주요내용
연계사업 추진을 위한 법·제도 개선	• 21대 국회 계류 중인 3개의 평화(통일)경제특구 관련 법 제정 추진 • 국방개혁 2.0에 따른 접경지역의 군부대 이전 유휴부지 및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활용을 위한 관련 토지 매입비 등의 법·제도적 개선 • 접경지역의 지역별 맞춤형 지원이 가능한 모자이크 패키지 법안 제정 추진
실효성 있는 소요자원 조달	• 접경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남북교류협력을 위한 지역개발 사업 추진 시 국비 부담비율 상향과 민간 자원의 활용방안을 종합적으로 고려
국내·남북·국제협력 차원의 거버넌스 구축	• 중앙부처·지자체·지역주민의 다원적 참여를 통한 접경지역협의체를 구성 • 남북접경위원회(가칭) 설치를 통한 남북 접경협력의 지속성 확보 • UN, UNESCO, IUCN 등의 국제기구 및 국제기관과의 접경협력 거버넌스 구축
접경지역 균형발전 모니터링체계 구축	• 중앙부처·지자체 간 협력을 통해 추진사업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평가할 수 있는 접경지역 균형발전 모니터링체계 구축

출처: 강민조 외 2020, 180.

참고문헌

강민조·임용호·오호영·강호제·양진홍·홍순직·박훈민·류지성. 2019. 경기북부 접경지역의 균형개발을 위한 종합 발전구상과 실천방안 연구 II. 세종: 국토연구원.

박양호. 2005. 지방자치단체간 협력에 의한 지역개발접근방식에 대한 고찰: 지역간 협력의 실증적 메커니즘을 중심으로. 환경논총. 43: 283-294.

※ 본 자료는 국토연구원에서 2020년 일반과제로 수행한 '강민조·임용호·최용환·최재현·오호영. 2020. 경기북부 접경지역의 균형개발을 위한 종합 발전구상과 실천방안 연구 III. 세종: 국토연구원의 내용을 수정·보완해 정리한 것임.

• **강민조** 국토연구원 한반도·동아시아연구센터 부연구위원
(mjkk@krihs.re.kr, 044-960-0681)

• **임용호** 국토연구원 한반도·동아시아연구센터 부연구위원
(yhlhm@krihs.re.kr, 044-960-0644)



KRIHS 국토연구원

세종특별자치시 국책연구원로 5
전화 044-960-0114

홈페이지 www.krihs.re.kr
팩스 044-211-4760

